

월/요/광/장

민혜숙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하지만 말의 힘은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독재정권 하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 죽어'라고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너 죽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말한 것처럼 '누가' 하는 말인가에 따라 그 말은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하고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숙여야 하는 것이 약한 자들의 비애이다. 그래서 힘을 가진 이들은 그만큼 말하는 데 조심스러워야 한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약자들은 강한 자들의 말에 의해 상처받게 된다. 말은 같이 되어 찌르고 상처를 남긴다.

언젠가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했다. "공부하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 정작 어린 자식이 집을 나가기를 바

라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아이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래서 "엄마, 갈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가나요."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가족 사이에서도 의식하지 못한 채 험한 표현을 자주 쓴다. 피는 물보라 진

찌르는 말, 사매는 말

하니가 웬만한 잘못은 피로 지워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모, 배우자, 선생님에 의해 상처받는 비율이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요즈음 남북관계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제에서 유감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말의 표현이다.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경협 없다'는 통일부장관의 말에 발끈한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측 직원들을 추방하는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 '역도'라는 듣기 민망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미국 또한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 FTA 비준동의안 제출은 물론 통과도 없다'는 강경한 발언을 해 한국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

외국어 열풍이 불다 보니 '~없이(without) ~없다'라는 이중 부정의 미국식 표현이 우리나라 말의 어법에 저리 잡고 말았다. 하지만 어감이면 이 표현을 '만일(If~)~한다면, ~할 것이다'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북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하겠

다.'든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엄마는 참 기쁘겠다.'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은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같은 내용을 부드럽게 표현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상처를 싸매는 표현의 지혜가 필요하다.

'~없이(without) ~없다'라는 일방적인 표현은 오만하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약속은 없이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강

하게 내세울 뿐이다. 그러나 '만일(If~)'이라는 표현에는 미약하게나마 약속이 들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처를 덜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면 참 좋겠다. ~하기를 바란다(I wish~)'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사장님이 사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더 부드러운 말을 쓴다면 더 밝은 사회가 될 것 같다.

물론 북한과 대화하는 일이 '담벼락'이라고 말하는 '선'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핵 신고 문제를 인쇄심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는 '햇볕 정책'에 대해 새 정부는 정책의 수정을 예고한 바 있다. 물론 뒷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의 힘을 인식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우리 속담에서 표현의 지혜를 빌릴 일이다.

(소설가·호남신학대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亞문화전당 건립 걱정 말라” 믿어도 되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축소·변경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가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청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돼 환영한다.

유 장관은 지난 25일 광주를 방문해 “오는 6월10일 기공식을 갖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 들어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변경될 우려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2020년까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이므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 장관의 발언이 ‘탑서비스’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말로만 걱정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 향후 청사진을 내놓아

야 한다. 이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바라보는 새 정부·여당의 시각이 긍정적인지 아닌지 때문이다.

지난해 말 대통령직인수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를 폐지키로 했다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나라당도 국정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위상을 국정사업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격하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거둬들였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축소·변경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가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으나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를 상황이다.

문화수도는 광주, 나아가 호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됐다는 이유로만으로 훼손돼서는 결코 안 된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靑 수석 ‘거짓 해명’ 그냥 덮을 일인가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과문이 확산되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수석비서관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고 다른 수석들의 위장 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아권은 일부 수석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두 달동안 청와대는 부자들만 모여 있나 하는 인상을 줬지만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핵심을 파악해서 딱딱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가 과연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만한 결심이 되어 있는가 등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수석비서관의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의 경질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일부 수석비서관의 교체 가능성과 함께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경질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와대가 ‘버티기’를 고집할 것인지 관심이 있다.

투기 등 의혹도 문제지만 일부 수석들의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 등은 큰 논란을 더 큰 문제로, 해명자료라든가 내놓은 자정확인서가 거짓으로 판명됐고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수석들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 수석비서관들이 재산을 축적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고 도덕성까지 의심 받는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돼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지만 드러난 문제점을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미수



최근 안양 초등학교 살인사건, 일산 초등학교 납치미수 사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국민이 성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라고 가르치는 대신 아는 사람이라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충격적인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성범죄자,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에게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강화

성만을 이유로 그들에게 수치감과 불명예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반인권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주게 되므로 처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위 제도들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 요건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시행하여 그 실효를

성범죄자 전자팔찌 필요하다

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성범죄 등록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진, 성범죄경력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장치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4월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10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폭력범죄 재범자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해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대안자와 가족들의 사생활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재범의 가능

거두고 있다. 물론 제도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안자와 가족들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것 광주에서 검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지도 2달이 지났다. 검사 임용 면접에서 검찰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질문을 받고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곳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다.

위 제도들이 바람직하게 시행되고 실효를 거두어 최소한 사람스런 우리의 아이들이 성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들에게 타인에 대한 경계심보다 타인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먼저 가르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지검 검사)

공정성 논란 ‘토폴 후기 타기’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치고 토폴에 관심없는 사람은 없다. 당장 유학에서부터 입사시험, 직장내 승진, 심지어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토폴 공부를 하는 게 우리나라다.

그만큼 다양한 곳에서 중요한 영어실력 평가의 잣대로 사용되는 만큼 그 공정성도 철저히 유지돼야 하는데 솔직히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각종 편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토폴을 본 사람들은 소위 ‘후기 타기’라는 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후기 타기란 먼저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문제유형과 출제어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고, 다른 수험생들이 이를 미리 보고 시험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에는 이 후기 타기를 보고 시험을 치러 좋은 성적을 냈다는 글이 자주 등장한다. 또 그로인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의성 글들도 올라온다.

진정한 영어 실력을 가리는 시험에 이런 편법이 유행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한 시험 권리와 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선의의 수험태도가 아쉽다.

▲오미영·목포시 해안동

기고

이승연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이며, 세계 경제를 주도해가는 경제대국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선진화되어 있고 지방자치는 어느 나라보다도 잘 발달돼 있어 정치인들이나 행정학자들은 늘 모델처럼 이야기한다. 그들의 지방자치는 교육·학예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위 제도들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1963년 이후 교육·학예에 관한 한 별개의 교육자치로 국가 책임하에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하면서 45년 동안 곳곳이 교육정책을 펴

화되어 있었으며, 일부 학교는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고교 모두 40명 정원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교사들의 정년도 60세였고, 학부모들은 수시로 수업을 참관하며 교사 평가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국민소득 4만불 경제대국의 교육여건은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했지만 내실은 참으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 현장에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너무도 풍요로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교육을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맹목적인 교육

일본도 부러워하는 우리 교육자치

며 투자한 결과 각 시·도가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해온 것으로 기록된다. 그런 결과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교육과 교단 선진화, 급식시설, 교실 개선 등 학교환경들이 가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최근 교육위원들과 5일 동안 동경을 비롯한 일본 곳곳의 초·중·고교를 심층적으로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토론도 해보았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성적 도덕관, 윤리적 국민성은 높이 평가할 수 있었으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덕목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교육현장은 너무도 열악했으며, 한국의 교육현장을 부러워했다. 컴퓨터 보급률의 저조와 기종의 낙후, 각종 교재 교구의 미비와 교사들의 OAS시설의 전무, 급식시설은 조리실만 있고 식단이 없이 교실급식이 일반

어진 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나마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나 환경이 일본을 앞서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2010년이면 우리도 지방자치 속으로 교육자치가 통합되고 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의 교육현장은 극도의 재정 궁핍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인간목의 투자가 교육투자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4년 임기 정치집단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을 송두리째 맡긴다면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이익에 의해 희생될 것이 명백하고, ‘교육의 장’이 ‘정치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가 발전시킨 우리의 문화이며 세계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자치인 것이다.

(광주시 교육위원회 의장)

소비자 우롱하는 백화점 고무줄 세일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가격적 세일 기간을 이용한다.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칫 선불리 샀다가 뒤늦게 세일이 나오면 기분도 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백화점 세일 기간을 보면 완전히 고무줄이다. 모 백화점은 오는 4월 정 기세일부터 기간을 17일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원자재가격이 오르자 백화점들이 물건을 싸게 파는 세일 기간을 연장해 고객을 끌어들이겠다고 계산한 것 같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백화점들은 그동안 보름 넘게 했던 세일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했다. 그 당시 백화점들은 소수 유통일서를 지키고 판매 가격의 정상화를 다져 소

비자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단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분별한 세일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그렇게 해서라도 백화점 물건값의 거품을 빼고 정상적인 유통 관행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6개월만이 지난 봄 정기세일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세일 기간을 다시 늘렸다. 백화점들이 필요에 따라 세일 기간을 늘린다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보충하기 위해 평소 물건값에 마진을 더 붙여서 팔게 된다. 소비자들은 고무줄 세일기간 때문에 늘 속는다는 기분과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정원·광주시 북구 누문동

無等鼓

근대 올림픽에서 성화가 처음 도입된 것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픽에서 채화해 릴레이식의 봉송을 한 것은 1936년 11회 베를린 올림픽 때부터다.

베를린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정치성을 띤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1933년 집권한 히틀러의 나치정권은 1차대전 패전국의 설움을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 떨쳐냈다. 베를린 올림픽은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알리는 수단이자, 옹호하는 독일의 힘을 상징했다.

베를린 올림픽 당시 그리스 올림픽에서 채화한 성화는 발칸반도 근교수자들을 거쳐 베를린으로 봉송됐다. 당시 성화 봉송로는 3년 뒤 2차대전을 도발한 독일군의 발칸반도 공격루트와 딱 떨어졌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성화가 올림픽에 있는 것은 아니다. 1951년 제1회 뉴델리대회 이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화는 개최국의 유서 깊은 곳에서 채화하는 것이 관례가 됐

다. 1986년 제10회 서울대회의 성화는 경주 화랑교육원에서 채화됐다. 전국체전에서는 1956년 제37회 대회 때부터 성화봉송 행사가 등장했다. 단군절이 임한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 있는 참성단이 채화 장소다.

8월8일 개막되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27일 서울 봉송행사를 마치고 다음 기차적인 북한으로 떠났다. 올림픽 성화가 서울을 거처간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세번째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은 ‘화해와 여정’이란 봉송 주제에 맞지 않게 ‘수난의 연속’이다. 티베트 시위 무력진압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거쳐 베를린으로 봉송됐다. 당시 성화 봉송로는 3년 뒤 2차대전을 도발한 독일군의 발칸반도 공격루트와 딱 떨어졌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1951년 제1회 뉴델리대회 이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화는 개최국의 유서 깊은 곳에서 채화하는 것이 관례가 됐

/오주승 사회1부장 joh@kwangju.co.kr

성화(聖火)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가)111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정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F A X>		222-8005	<F A X>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F A X>		227-9500	<F A X>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F A X>		02-773-9331	<F A X>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